



서 성 배
(사)한국계육협회장

기 존 의 잘 못 된 거 래 관 행 을 바 로 잡 자

최근 우리 닭고기 업계가 계육산업의 구조개선 및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 신청한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부분이 왜곡돼 보도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것이 사실이며, 왜곡된 보도가 닭고기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닭고기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공동행위는 닭고기의 소비자가를 올려 무조건 비싸게 팔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유통관행을 바로잡아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공동행위를 요청한 주된 요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과거 닭고기가 아닌 생계를 사고 팔던 시절의 가격결정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20년 전의 가격결정구조가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닭고기의 공장도가격은 [(①생계시세+③운반비)/②수율+④제비용]×⑤중량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운반비, 수율, 제비용 등은 거의 변동이 없다.

결국 현재로서는 생계가격이 닭고기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국내 육계의 85%가 계열화 사업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닭고기 수직 계열화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온 사유는 병아리 부화에서부터 닭사육, 도계·가공, 시장출하까지 계열업체가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줄이고, 사육농가에는 약정된 사육수수료를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2006년도 닭고기 생산원가를 계산해보면 1,003원/kg으로 5년전의 1,005원/kg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근의 국제곡물가와 유류대 등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07년 호당 농가소득을 보면 大동물(소, 돼지, 양 등)은 '06년 대비 21.8%가 감소한 반면 小동물(닭, 오리)은 15.4%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계가격에 의해 전체 닭고기 가격이 널을 뛰듯 움직이는 것은 현대화된 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시장에서 '닭'을 사고 팔았지만 현재는 '닭고기'를 사고 파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실 생산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다만 닭을 출하하고 정산한 후에 남으면 남는 것이고 아니면 빚을 지는 그런 형국이었다. 다음에 기회를 잘 잡으면 한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계획된 입식, 그리고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온의 변화, 그리고 질병 등으로 약간의 변수는 작용할지 모르나 전체적인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고 그 방편의 하나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청을 한 것이다.

단순 불황극복 행위의 하나로 가격담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물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료, 유류 가격폭등 등 일련의 사건들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불과 일년 사이에 육계 생산비는 kg당 400원 이상 인상됐다. 3월 24일 현재 육계 판매 가격은 kg당 1,36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kg당 960원이나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육계 관련인 조차 닭고기 시세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kg당 1~2백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상황과악이 안 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과 몇 개월 안에 국내 닭고기 산업은 파경을 맞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안정된 닭고기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닭고기에 대한 가격 불신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자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